데스크 칼럼 _

육계자조금 사업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퇴색돼서는 안된다.

본지 김한웅 부장

"육계의무자조금사업" 참으로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분명 어떤 식으로든 결론에 도달해야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손쉽게 해결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육계는 '계열화사업 체계'라는 산업의 특성상 분명히 소, 돼지 등 타 축종과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미 약 70%의 계열화가 진척돼 있는 관계로 타 축종에서는 그 존재가 아직까지는 미미한 계열주체라는 또 다른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육계의무자조금 도입 초기부터 육계자조금은 타 축종에서는 고민하지 않았던 소유의 개념, 자조금의 거출대상(농가 or 닭 소유주) 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자조금사업은 표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어야 하지만 서로의 이해관계에

얽혀 거론됐던 문제점들을 소홀히 했던 점은 모두가 자성하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다.

지난달 20일 경기 안성 소재 농협중앙회 연수원에서 개최된 육계의무자조금 대의원총회는 사전에 논의돼지 못했던 사안들이 총체적으로 표출된 사례이다.

결국 관리위원 위촉문제가 불거져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내일을 기약해야 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총 135명의 대의원 중 110명이 참석, 육계의무자조금 거출여부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85표, 반대 24표, 무효 1표로 자조금 거출을 결정지었다.

그러나 찬반투표 이전부터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자조금 거출대상이 누구인지 또한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지 등등 총회 초반부터 이날 총회가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하기에 충분했다.

대의원 110명이 투표에 참여해 85명이 거출에 찬성하고 25명이 반대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막상 자조금 거출에 들어간다면 찬성한 대의원 중 상당수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행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다소 모순점이 있다는 점은 필자 개인적으로도 인정을 하는 부문이다.

그러나 현행 법의 취지가 각 축산단체에 자조금 사업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 법률상으로는 대의원이나 축산단체 모두를 만족시켜줄 만한 어떠한 근거 또는 명분이 없는 것 같다.

현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는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각 축산단체가 협의 제정하게 되어있다. 자조금 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각 축산단체(농협중앙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의 입장에서는 자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줄 관리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데 반해 책임만 강조하는 것도 모순이기 때문이다.

농림부에서도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모두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법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육계의무자조금사업 추진목적, 즉 닭고기 소비촉진을 통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취지가 각 개인의 목적이나 욕구충족 여부에 따라 퇴색되거나 좌절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바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타 경쟁축종에 뒤지지 않도록 소비확대 방안을 비롯 AI 대책마련 그리고 외국산 닭고기 수입증가 대책마련이 그것이다.

또한 한·아세안 FTA를 비롯 한·미 FTA에 이어 중국, 브라질 등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또한 우리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위기사항들이다. 관련업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처해나가지 않는다면 커다란 우를 범할 일들이다. 조금씩 양보를 통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랄 뿐이다.